

##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11. 2. 2021누68331]



###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에린)

【피고, 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한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0구합68912 판결

【변론종결】 2022. 8. 24.

### 【주문】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국립○○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대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2009. 4. 1.부터 ○○대가 설립한 국립대학병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여 왔고, 2018. 4. 1. ○○대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그런데 참가인이 2018. 7. 24. 실시한 '갑질·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답변이 다수 제출되었다.

그에 더하여 재활의학과 소속 작업치료사들은 2018. 9. 27. 참가인에게, '2016년 이후부터 원고로부터 폭행, 폭언, 직권 남용 등을 당해왔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였다(이하 '제1고충민원'이라 한다).

다.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10. 12. ○○대에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그 소명과 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원고 등 담당의로부터 처방받은 특수작업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의료수가가 낮은 단순작업치료 또는 복합작업치료만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특수작업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하였다(이하 '1차 신고'라 한다).

- 라. 제1고충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 중 일부는 원고가 폭언, 폭행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는데, 2018. 11. 27. 그 동영상이 배포되었고, "○○대 병원 교수 '갑질' 동영상 파문" 등의 제목으로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한편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그 무렵 원고를 작업치료사들 폭행 등의 사실로 고소·고발하였다[이후 원고는 의료법위반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1. 6. 22.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19고단 2172), 2022. 1. 18. 그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의 유죄판결(제주지방법원 2021누426)을 받았는데,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7. 15.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2도2060) 그대로 확정되었다].
- 마. ○○대 총장은 2018. 12. 24. 제1고충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하였다.
- 바.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12. 27. '○○대 총장에게 원고의 참가인 재활의학과 직무 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 원고는 그 소명과정에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하였다(이하 '2차 신고'라 한다).
- 사. 또한 원고는 2019. 1.경 참가인 소속 물리·작업치료사들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및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이하 위 고발을 '3차 신고'라 하고, 1차, 2차 각 신고와 함께 '이 사건 각 신고'라 통칭한다).
- 아. ○○대 총장은 작업치료사들의 제1고충민원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위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14.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1심: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097호,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80호, 상고심: 대법원 2022두32610호)].
- 자. 참가인 소속 재활의학과 전공의 2인은 2019. 4. 8. 참가인에게 '원고가 제1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공의들에게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강요하였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공의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지시 등으로 잦은 연락을 하였으며, 전공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회식 또는 야유회 등의 명목으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작업치료사 폭행 장면이 담긴 치료 동영상을 은폐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제2고충민원'이라 한다).
- 차. 참가인은 2019. 4. 17.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위원회는 2019. 5. 10. 참가인에게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후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9. 5. 14.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의결하였고, 참가인 원장은 2019. 5. 15. ○○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하였다.
- 대 총장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겸직해제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겸직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0. 10. 위 겸직해제 처분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구체적 행위,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고, 위 겸직해제 처분 시에도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인지 적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겸직해제 처분을 취소하였다.
- 카.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9. 11. 5.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이유'라 한다)로 다시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의결하였고, 참가인 원장은 2019. 11. 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이하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참가인 정관 제33조) 가. 부당한 구명활동의 지시 또는 강요 재할의학과 작업치료사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1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원고는 그 작업치료사들을 상대로 작업치료 관련 신고를 하는 등 원고와 작업치료사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 참가인이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① 2018. 9. 7. 23:00경 월례회의 자료 및 작업치료사들의 오더 변경 요청 사실을 수집하여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② 2018. 9. 22. 21명 이상의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③ 2018. 12. 1.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규정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고, ④ 2018. 12. 6. 23:15경 2015년 통계자료, 직원 폭행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 제1고충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의 연차일정, 작업치료사들의 집회사진, 의료수가별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전공의에 대한 사적 지시 및 업무시간 외 빈번한 연락 - 2018. 5. 30. 22:11경 전공의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등 평일에는 근무시간 외에, 당직이 아닌 주말에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 2018. 8. 18. 소외 2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하여 위 교수와 청와대를 비난하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

-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전공의 중 1인에게 약 2,000통의 전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의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내용이었다.

- 전공의에게 빵을 만들어 먹자고 하여 전공의가 06:00경부터 빵을 굽기도 하였고, 2017. 6. 28.경에는 근무시간 중에 토스트와 빵 28개를 굽겠다고 하면서 21:00경 관련 지시를 하였으며, 그 밖에도 떡볶이, 부대찌개 등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매하도록 시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였다.

다.

전공의 및 작업치료사에 대한 폭언, 욕설, 폭행 - 제1고충민원으로 징계 등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전공의 중 1인에게 "이 새끼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 애네들이 애네 셋이 A, B, C? 야 B 완전 개쓰레기 새끼네", "C, C 이 개새끼가 그냥 진짜 욕나온다.

아예 죽여버렸어야 됐는데 봐줬더니 그런 그지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짜증나는 거지"라고 하여 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에 대한 욕설을 한 바 있다.

- 그 밖에도 2017년경 환자, 보호자, 의료진, 의료기사 및 간호사, 선후배 전공의들이 보는 앞에서 전공의의 등을 때리거나 꼬집고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전공의에 대한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 및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중용 - 전공의들에게 ① 2017. 7. 21. 물놀이를 가자고 하여 11:30경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으로 물놀이를 갔고, ② 2018. 4. 2. 벚꽃놀이를 가자고 하여 17:00경 제주시 삼도동 전농로로 벚꽃놀이를 갔으며, ③ 2018. 6. 1. 놀러가자고 하여 15:00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해수욕장에 갔고, ④ 2018. 7. 11. 회식을 하자고 하여 17:20경 도남오거리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으며, ⑤ 2018. 7. 31. 회식을 하러 가자고 하여 17:20경 제주시 금복촌 횃집에 가게 하는 등 전공의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 제1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위 ③의 삼양동 해수욕장 무단이탈 건이 문제되자 2018. 10. 2. 13:00경 전공의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 애들이랑 절대 같이 갔다는 소리하면 안 되고"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였다.
- 마. 관련 동영상 은폐 시도 - 제1고충민원 관련 환자평가를 녹화한 동영상과 관련하여, ① 전공의에게 언어치료사가 관리하는 작업치료 과정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캠코더 및 컴퓨터 외장하드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강요하였고, ② 근전도실에 보관되어 있는 작업치료 과정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져가 2018. 9. 7. 16:00경 재활센터 내 제2진료실의 컴퓨터로 옮긴 후 2017년까지의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며, 2018. 9. 27. 그 컴퓨터로 옮긴 동영상까지 모두 삭제하였고, ③ 작업치료 동영상 외장하드를 보관하고 있던 언어치료사에게 연락하여 동영상 은폐를 시도하였음에도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 2.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 부족 - 위와 같은 전공의 관련 건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건 등으로 이미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과 아울러 병원 전공의, 재활의학과 의료진(교수), 의료기사 및 병동 간호사 등이 원고가 정직처분을 마친 후 복귀하면 사직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그 밖에 졸업생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감안할 때 원고는 지도교수 및 겸직교원으로서 더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타. 한편 참가인 원장은 2019. 11. 6. 제2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전공의들로부터 원고와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을 이유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1조의2,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관리를 위한 지침」 제8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입원환자 주치의 배정에서 제외, ② 재활의학과 전공의들에 관한 회의 등 참여 제한, ③ 전공의들의 의사에 반한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와의 분리명령(이하 '이 사건 분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 파.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①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고를 한 사실을 해당 치료사들에게 유출(이하 이를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라 한다)함으로써 그 치료사들이 원고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하여 언론에서 '○○대병원 갑질 교수'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도리어 참가인은 언론 기사로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명분으로 원고에 대한 일련의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이하 '① 신청사유'라 한다). ②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의 취하를 종용하고, 사직을 권유하였고(이하 '② 신청사유'라 한다), ③ 관련된 허위사실(원고가 치료사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저장된 외장하드 은폐 시도)을 유포하여 참가인 소속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하였다(이하 '③ 신청사유'라 한다). ④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분리명령 등 조직적인 진료방해를 하다가(이하 '④ 신청사유'라 한다), ⑤ ○○대 총장에게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까지 하였다(이하 '⑤ 신청사유'라 한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일련의 부당한 조치는 공익신고인 이 사건 각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로 인해 ○○대 총장이 곧 겸직해제 조치를 취할 우려가 명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겸직해제) 금지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보호신청 조치와 함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하. 이에 피고는 조사를 거친 후 2020. 5. 25.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의 취지를 '참가인이 ○○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검직해제를 요구한 것(이 사건 검직해제 요구)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이므로 원상회복을 신청한다'로 정리한 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이 사건 각 신고는 공익신고에, 이 사건 검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이 사건 각 신고와 이 사건 검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 【이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 국립○○대학교(이하 '○○대'라 한다)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대 총장의 검직허가를 받아 2009. 4. 1.부터 ○○대가 설립한 국립대학병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여 왔고, 2018. 4. 1. ○○대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나. 그런데 참가인이 2018. 7. 24. 실시한 '갑질·폭언·폭행·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에서, 원고가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답변이 다수 제출되었다.

그에 더하여 재활의학과 소속 작업치료사들은 2018. 9. 27. 참가인에게, '2016년 이후부터 원고로부터 폭행, 폭언, 직권남용 등을 당해왔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였다(이하 '제1고충민원'이라 한다).

다.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10. 12. ○○대에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그 소명과 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원고 등 담당의로부터 처방받은 특수작업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의료수가가 낮은 단순작업치료 또는 복합작업치료만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특수작업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하였다(이하 '1차 신고'라 한다).

라. 제1고충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 중 일부는 원고가 폭언, 폭행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는데, 2018. 11. 27. 그 동영상이 배포되었고, "○○대 병원 교수 '갑질' 동영상 파문" 등의 제목으로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한편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그 무렵 원고를 작업치료사들 폭행 등의 사실로 고소·고발하였다[이후 원고는 의료법위반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1. 6. 22.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19고단 2172), 2022. 1. 18. 그 항소심에서 벌금 5,000만 원의 유죄판결(제주지방법원 2021누426)을 받았는데, 위 항소심 판결은 2022. 7. 15.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2도206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대 총장은 2018. 12. 24. 제1고충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하였다.

바.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 12. 27. '○○대 총장에게 원고의 참가인 재활의학과 직무 검직해제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원고는 그 소명과정에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하였다(이하 '2차 신고'라 한다).

사. 또한 원고는 2019. 1.경 참가인 소속 물리·작업치료사들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및 의료기기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이하 위 고발을 '3차 신고'라 하고, 1차, 2차 각 신고와 함께 '이 사건 각 신고'라 통칭한다

).

아. ○○대 총장은 작업치료사들의 제1고충민원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위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7. 14.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1심: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097호, 항소심: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80호, 상고심: 대법원 2022두32610호].

자. 참가인 소속 재활의학과 전공의 2인은 2019. 4. 8. 참가인에게 '원고가 제1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공의들에게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강요하였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공의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지시 등으로 잦은 연락을 하였으며, 전공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회식 또는 야유회 등의 명목으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작업치료사 폭행 장면이 담긴 치료 동영상은 은폐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제2고충민원'이라 한다).

차. 참가인은 2019. 4. 17.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위원회는 2019. 5. 10. 참가인에게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9. 5. 14. 원고에 대한 검직해제 요구를 의결하였고, 참가인 원장은 2019. 5. 15. ○○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검직해제를 요구하였다.

○○대 총장은 2019. 5. 20. 원고에 대하여 검직해제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검직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0. 10. 위 검직해제 처분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구체적 행위,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고, 위 검직해제 처분 시에도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인지 적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검직해제 처분을 취소하였다.

카.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9. 11. 5. 아래와 같은 이유(이하 '이 사건 검직해제 요구이유'라 한다)로 다시 원고에 대한 검직해제 요구를 의결하였고, 참가인 원장은 2019. 11. 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검직해제 요구(이하 '이 사건 검직해제 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1.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참가인 정관 제33조) 가. 부당한 구명활동의 지시 또는 강요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사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1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원고는 그 작업치료사들을 상대로 작업치료 관련 신고를 하는 등 원고와 작업치료사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 참가인이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① 2018. 9. 7. 23:00경 월례회의 자료 및 작업치료사들의 오더 변경 요청 사실을 수집하여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② 2018. 9. 22. 21명 이상의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며, ③ 2018. 12. 1.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규정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고, ④ 2018. 12. 6. 23:15경 2015년 통계자료, 직원 폭행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 제1고충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의 연차일정, 작업치료사들의 집회사진, 의료수가별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전공의에 대한 사적 지시 및 업무시간 외 빈번한 연락 - 2018. 5. 30. 22:11경 전공의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등 평일에는 근무시간 외에, 당직이 아닌 주말에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업무지시를 하였다.

- 2018. 8. 18. 소외 2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하여 위 교수와 청와대를 비난하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
  -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전공의 중 1인에게 약 2,000통의 전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의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내용이었다.
  - 전공의에게 빵을 만들어 먹자고 하여 전공의가 06:00경부터 빵을 굽기도 하였고, 2017. 6. 28.경에는 근무시간 중에 토스트와 빵 28개를 굽겠다고 하면서 21:00경 관련 지시를 하였으며, 그 밖에도 떡볶이, 부대찌개 등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매하도록 시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였다.
- 다.

전공의 및 작업치료사에 대한 폭언, 욕설, 폭행 - 제1고충민원으로 징계 등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전공의 중 1인에게 "이 새끼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 애네들이 애네 셋이 A, B, C? 야 B 완전 개쓰레기 새끼네", "C, C 이 개새끼가 그냥 진짜 욕나온다.

아예 죽여버렸어야 됐는데 봐줬더니 그런 그지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짜증나는 거지"라고 하여 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에 대한 욕설을 한 바 있다.

- 그 밖에도 2017년경 환자, 보호자, 의료진, 의료기사 및 간호사, 선후배 전공의들이 보는 앞에서 전공의의 등을 때리거나 꼬집고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전공의에 대한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 및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중용 - 전공의들에게 ① 2017. 7. 21. 물놀이를 가자고 하여 11:30경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으로 물놀이를 갔고, ② 2018. 4. 2. 벚꽃놀이를 가자고 하여 17:00경 제주시 삼도동 전농로로 벚꽃놀이를 갔으며, ③ 2018. 6. 1. 놀러가자고 하여 15:00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해수욕장에 갔고, ④ 2018. 7. 11. 회식을 하자고 하여 17:20경 도남오거리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으며, ⑤ 2018. 7. 31. 회식을 하러 가자고 하여 17:20경 제주시 금복촌 횃집에 가게 하는 등 전공의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 제1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위 ③의 삼양동 해수욕장 무단이탈 건이 문제되자 2018. 10. 2. 13:00경 전공의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 애들이랑 절대 같이 갔다는 소리하면 안 되고"라고 허위 진술을 중용하였다.

마. 관련 동영상 은폐 시도 - 제1고충민원 관련 환자평가를 녹화한 동영상과 관련하여, ① 전공의에게 언어치료사가 관리하는 작업치료 과정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캠코더 및 컴퓨터 외장하드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강요하였고, ② 근전도실에 보관되어 있는 작업치료 과정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져가 2018. 9. 7. 16:00경 재활센터 내 제2진료실의 컴퓨터로 옮긴 후 2017년까지의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며, 2018. 9. 27. 그 컴퓨터로 옮긴 동영상까지 모두 삭제하였고, ③ 작업치료 동영상 외장하드를 보관하고 있던 언어치료사에게 연락하여 동영상 은폐를 시도하였음에도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2.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능력 부족 - 위와 같은 전공의 관련 건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건 등으로 이미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과 아울러 병원 전공의, 재활의학과 의료진(교수), 의료기사 및 병동 간호사 등이 원고가 정직처분을 마친 후 복귀하면 사직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 그 밖에 졸업생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감안할 때 원고는 지도교수 및 겸직교원으로서 더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타. 한편 참가인 원장은 2019. 11. 6. 제2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전공의들로부터 원고와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을 이유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1조의2,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관리를 위한 지침」 제8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① 입원환자 주치의 배정에서 제외, ② 재활의학과 전공의들에 관한 회의 등 참여 제한, ③ 전공의들의 의사에 반한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와의 분리명령(이하 '이 사건 분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파.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①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고를 한 사실을 해당 치료사들에게 유출(이하 이를 '비밀보장의무 위반'이라 한다)함으로써 그 치료사들이 원고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하여 언론에서 '○○대병원 갑질 교수'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도리어 참가인은 언론 기사로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명분으로 원고에 대한 일련의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이하 '① 신청사유'라 한다). ②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의 취하를 종용하고, 사직을 권유하였고(이하 '② 신청사유'라 한다), ③ 관련된 허위사실(원고가 치료사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저장된 외장하드 은폐 시도)을 유포하여 참가인 소속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하였다(이하 '③ 신청사유'라 한다). ④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분리명령 등 조직적인 진료방해를 하다가(이하 '④ 신청사유'라 한다), ⑤ ○○대 총장에게 이 사건 검직해제 요구까지 하였다(이하 '⑤ 신청사유'라 한다). 이와 같은 참가인의 일련의 부당한 조치는 공익신고인 이 사건 각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검직해제 요구로 인해 ○○대 총장이 곧 검직해제 조치를 취할 우려가 명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검직해제) 금지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보호신청 조치와 함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하. 이에 피고는 조사를 거친 후 2020. 5. 25.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의 취지를 '참가인이 ○○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검직해제를 요구한 것(이 사건 검직해제 요구)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이므로 원상회복을 신청한다'로 정리한 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이 사건 각 신고는 공익신고에, 이 사건 검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 이 사건 각 신고와 이 사건 검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다.